“인태지역과 경제·안보 협력… 韓·中·日 정상회의 추진”

〈인도-태평양〉

尹대통령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인도와 전통적 제조업 분야 넘어
첨단제조업·디지털·우주협력 논의
인니와 다양한 분야서 22건 계약
리창·기시다 총리 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에 대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올해 초 발효된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며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에서의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이뤄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檢, 증거 단 한 개도 없어… 국민·역사가 판단할 것”

이 대표 단식 13일차… 검찰 재출석
“민생·국민 생명·안전 주력 부탁”
박광온 “잇단 소환 조사 지나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